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순경 수사 >

- 해양경찰학개론(01), 형법(02), 형사소송법(03) -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분야, 계급,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국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 ②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실정법상 해양경찰청에 분배된 사무를 말한다.
- ③ 해양경찰청이 하는 사인과의 계약이나 대국민 홍보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개념에 포함된다.
- ④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 단속은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된다.

2. 다음 <보기>의 해양경찰 역사를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 해양경찰대설치법 제정
- ㉡ 해양경찰대 청사 인천 이전
- ㉢ 수난구호법 제정
- ㉣ 상공부 해무청 소속으로 변경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3.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되, 위원회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③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퇴직자도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4.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시보 임용과 승진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② 정규 임용의결은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치안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지 않으며,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 ④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계산할 때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해양경찰 작용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금
- ② 대인적 즉시 강제
- ③ 대집행
- ④ 경찰 허가

6. 다음 중 예산집행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배정요구 → 배정계획수립 →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 ② 배정요구 → 배정계획수립 → 배정
→ 지출행위 → 지출원인행위
- ③ 배정계획수립 → 배정요구 → 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 ④ 배정계획수립 → 배정요구 → 배정
→ 지출행위 → 지출원인행위

7. 다음 경찰 통제의 유형 중에서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 ① 국회의 국정감사권
- ② 국회의 예산심의권
- ③ 행정소송
-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

8.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5,000톤급 경비함 명칭은 역사적 지명·인물로, 3,000톤급 경비함 명칭은 ‘태평양 ○호’로 명명한다.
- ② 신조 함정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에 관한 편제 명령권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다.
- ③ 소속기관장은 당직 함정 및 예비 당직 함정을 각 1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하되, 당직 함정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예비 당직 함정이 당직 함정 임무를 수행한다.
- ④ 특수함정별 운용계획은 잠수지원함의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 소방정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이, 중형 특수기동정의 경우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이 각각 수립한다.

9. 다음 <보기> 중 불법 외국 선박에 대한 단속 근거로 보기 어려운 법령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 「해양경비법」
- ㉢ 「해양과학조사법」
- ㉣ 「UN해양법협약」
- ㉤ 「어선법」
- ㉥ 「해양환경관리법」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양과학조사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1.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자국 영해의 외측한계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은 해양과학 조사와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 ③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한다.
- ④ 연안국은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12. 다음 중 「국제 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지침서(IAMSAR)」상 사용되는 용어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조정관	OSC	On-scene Co-ordinator
②	항공수색 구조조정관	ACO	Aircraft Co-ordinator
③	구조조정본부	RCC	Rescue Co-ordination Center
④	수색구조대	SRR	Search and Rescue Region

13.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치목적은 해상 수난 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야간 운항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항해등 ㉡ 위성항법장치 ㉢ 통신기기
- ㉣ 호루라기 ㉤ 레이더 반사기 ㉥ 구명튜브
- ㉦ 소화기 ㉧ 자기점화등 ㉨ 나침반
- ㉩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 ① 7개 ② 8개 ③ 9개 ④ 10개

15. 다음 <보기>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의 조업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기 > —

- ㉠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범죄수사에서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추구한다.
- ② 절차적인 측면에서 수사를 말한다.
- ③ 수사의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 ④ 주로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한다.

17. 다음 중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 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의 단계이다.
- ②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 ③ 헌법 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은 방첩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간첩, 태업, 전복 등의 국가위해행위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18.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MARPOL ② SOLAS
- ③ SAR ④ COLREG

19. 다음 중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북태평양 해양 경찰회의(NPCGF: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가입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싱가포르 ② 캐나다 ③ 일본 ④ 미국

20.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③ 2킬로미터 이상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유선장에는 노도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추어야 한다.

형 법

1. 형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은 가언적(假言的) 규범으로서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다.
- ② 형법은 실체법이면서 공법(公法)이다.
- ③ 형법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준거법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임과 동시에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 ④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2.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등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범죄단체조직죄는 상태범으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④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3.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집단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
- ② 실질적 객관설에 따르면 촉탁살인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사기나 공갈을 범한 자를 공범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 ③ 의사설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의 개념을 전제로 하므로 논리적으로 순환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진정한 분범이나 자수범(自手犯)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5.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소년법」이 개정되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항소심 법원은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 ②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③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실행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이 강도를 하기 위해 A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후회하여 다시 되돌아 온 경우, 甲은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6. 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제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④ 甲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이 속한 협회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7.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대표이사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동업자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장물에 해당한다.
- ㉢ 대표이사 乙이 동업자인 甲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회사자금의 일부를 빼내어 甲에게 임의로 지급한 경우,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령하였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신탁자의 승낙 없이 그 정을 아는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는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이다.

9.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② 목장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선박파괴죄에서 정한 ‘파괴’란 본죄가 공공위험죄인 본질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의 손괴임을 요한다.
- ④ 선단의 책임선 선장 甲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종선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종선이 풍랑으로 인해 매몰된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甲에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 폭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② 甲이 먼저 乙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기 때문에 乙이 甲을 부등켜 안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 ④ 비닐봉지 안에 인분을 넣어 피해자의 마당에 투척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대표 이사인 甲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甲이 구속되어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甲을 면회하여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甲이 종전에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甲이 자신의 처를 통해 위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준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일부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고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1차 매수인이 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위 등기가 궁극적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2. 강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한 경우, 이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채권자 甲이 채무자 A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A를 협박하고, 이에 A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A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A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甲에게는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④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13. 체포·감금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관리자가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 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14. 외환에 관한 죄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 ①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② 외국사절에 대한 명예훼손죄
- ③ 외국국기모독죄
- ④ 외교상 기밀누설죄

15. 약취·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버지의 부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어머니의 아이들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③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④ 甲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A녀(14세)의 동의만을 얻어 그녀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16. 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기수 여부를 불문한다.
-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 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 ㉢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한 경우, 1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 ㉣ 절도범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A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을 정도로 과도한 폭력을 가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솔뚜껑을 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A가 그 솔뚜껑에 스쳐 상처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끌고 가던 절도범이 자신을 추격하여 온 A에게 먹살을 잡히게 되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그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乙 소유의 현금카드를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5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만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만원은 자신이 취득한 경우, 甲은 인출한 5만원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명의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③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④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막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진의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서명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 ㉣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 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축택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도주와 범인은닉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된다.
- ② 형집행 중인 자가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오자,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멀리 달아나게 한 경우에는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
- ③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다른 공범의 사주를 받아,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사주를 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주를 한 공범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④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범의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여객기에서 여성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몽골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배제된다.
- ②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등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 ④ 현행범인인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2. 다음 중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하나의 문서로 甲, 乙, 丙을 모욕한 경우, 甲이 한 A의 모욕에 대한 고소는 乙, 丙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② 조카 甲, 乙이 친구 丙과 함께 삼촌 D의 집에 놀러갔다가 D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조카 甲, 乙에게도 미친다.
-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1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3. 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확정된 즉결심판
-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 ③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
- ④ 무죄판결

4. 다음 중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5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②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체포의 통지는 체포를 한 때로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통지할 수 있다.
- ④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다.

5. A 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 D가 미성년자 납치·감금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乙을 인도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 ㉠ 2024. 9. 30. 23:00 사인 D가 현행범인 乙을 체포
- ㉡ 2024. 10. 1. 22:00 사법경찰관 甲은 사인 D로부터 현행범인 乙을 인수
- ㉢ 2024. 10. 2. 16:00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
- ㉣ 2024. 10. 3. 10:00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및 수사관계서류 접수
- ㉤ 2024. 10. 4. 14:00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2024. 10. 4. 18:00 구속영장 발부, 20:00 검찰청에 구속영장 및 수사관계서류 반환, 22:00 구속영장 집행

- ① 2024. 10. 10. 24:00
- ② 2024. 10. 11. 24:00
- ③ 2024. 10. 12. 24:00
- ④ 2024. 10. 13. 24:00

6. 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문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 보 기 >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 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 시간이 원칙적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 ① 26 ② 27 ③ 28 ④ 32

7. 다음 <보기>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8. 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②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 ③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범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도 가능하다.

9.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0. 다음 중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② 명예훼손죄에서 전과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③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
- ④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심신미약이었느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11.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한다.
- ②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 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
- ③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 본래증거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다.

12.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3. 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제 회부할 수 있다.
- ③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④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 ④ 당해 사건의 피해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15.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②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으며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무죄추정이 유지된다.
- ③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16. 다음 중 공판절차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범죄피해자 등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증거물인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④ 증인신문시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가 있다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권자는 검사만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을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경우 불복할 수 없다.

18. 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의 간이공판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항고는 가능하다.
-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그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이다.
-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20.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
- ②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건의 결과
- ③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④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